



공정 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03143)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 398-3620~2 FAX 398-3630

발행인: 김성진
 공보위원장: 류지복

http://www.newsunion.co.kr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사 불공정 논란 ‘교과서 편향’ 기사가 되레 편향 시비 불러

지난 한 달 간 한국 사회를 달군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다룬 연합뉴스 기사는 과연 공정했는가.

회사는 10월 한 달 1천건이 넘는 관련 기사를 제작하며 교과서 문제 보도에 천착했다. 하지만 일부 편향성 시비를 불러올 만한 기사를 송고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 공보위의 판단이다.

특히 기획기사가 문제였다. 회사는 10월15일 <역사교과서 제언>이라는 슬러그로 9건의 기사를 보냈다. 해당 시리즈가 나간 때는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대한 찬반 격론이 불붙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기획기사는 “새 교과서 출간에 필요한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자”

라는 편집자 주에서 보듯 새 교과서를 어떻게 집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화를 둘러싼 대립이 극심했음을 고려하면 국정화가 옳은지 따져봐야 할 시점에 이는 제쳐두고 어떤 국정 교과서를 만들 지에 집중한 것이다.

기사 방향이 새 교과서에 담은 내용에 맞춰지다 보니 일부 교수들은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그 주장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9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반대가 있어도 국정화로 가겠다고 결정한 상태였다. 비가역적인 사항이라면 어떻게 하면 교과서를 잘 만들고 기존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때는 국정화가 확정고시되기 이전으로 공식적인 여론수렴기간이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기획기사가 나간 것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그대로 회사의 편집방향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송고된 <바른 역사교육> 15건의 기획기사도 짙어볼 부분이 적지 않다.

슬러그 자체가 ‘올바른 교과서’를 표방하는 정부와의 코드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내용적으로도 국정화 찬성론자의 문제 의식이 집중적으로 소개된 반면 반대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수준에 그치거나 아예 없는 경우까지 있었다.

<출판사별 현대사 편향성 ‘대해부’...

북한에 관대> 기사는 수정되기 전 교과서의 지적사항을 담은 것이지만 독자 입장에서 지금도 이런 교과서가 보급되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된 28개 학회의 국정화 반대 성명을 보도한 기사에서는 28개 학회 앞에 작성기사 단계에 없던 ‘진보’라는 단어가 추가돼 마치 진보성향 학회의 성명으로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침체하게 갈리는 사안에 회사가 이처럼 한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국가기간통신사라면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배포도 안된 교과서로 편향성 공격 온당한가 교육부 지적 2013년 교과서는 검정 전 ‘심사본’

회사의 보도는 교육 현장에 배포되지도 않은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현행 교과서를 문제삼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교육부가 편향성을 대거 지적한 2013년 교과서는 검정 과정을 거친 최종 교과서가 아니라 출판사들이 검정을 위해 제출한 ‘심사본’이다. 교육부는 심사를 통해 이들 교과서의 편향 사례와 오류를 찾아 출판사에 수정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수정을 거친 ‘최종본’ 교과서가 2014년에 배포돼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부에서 지적한 내용이 담긴 2013년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비유하자면, 2013년 교과서를 비판하는 것은 데스크를 거치지 않은 작성 기사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그러나 회사 측은 ‘수정되기 전 한국사 교과서들의 편향적 내용은’이라는 현장 기자의 작성 기사 제목에서 굳이 ‘수정되기 전’이라는 말을 빼버림으로써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포털에 송고된 최종본과 종합 기사에서는 <출판사별 현대사 편향성 ‘대해부’...> “북한에 관대”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읽어서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편향성을 파헤친 기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사측은 9일 편집위원회에서 2013년 교과서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측은 현재의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편향성이 있다

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만약 그 주장이 맞다면 더더욱 2013년 심사본 교과서가 아니라 지금 쓰이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관순 열사 누락 논란은 2014년 배포본(지금의 고2 교과서)과 관련한 부분이므로 상대적으로 실제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모두 수용돼 2015년 배포본(지금의 고1 교과서)에는 유 열사가 모두 언급돼 있다. 그럼에도 우리 기사의 제목은 <고교 한국사 2014년 보급본 2종에 유관순 빠졌다>였다. 이 기사는 2015년 교과서도 자세히 분석했다. 그렇다면 가장 업데이트된 교과서를 제목으로 뽑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

‘바른 역사교육’ 시리즈 … 왜 하필 ‘바른’ 인가 내용도 ‘국정화 찬성’ 목소리 전달 많아

회사가 10월29일부터 11월2일에 걸쳐 15쪽지로 송고한 <바른 역사교육> 시리즈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의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 역사교육>이라는 슬러그부터 ‘올바른 교과서’를 표방하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사실상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올바른 교과서’는 정부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하고자 내놓은 용어라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강조해온 연합뉴스가 <바른 역사교육> 시리즈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선도’ 한다는 등의 비판이 미디어비평

매체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바른 역사교육> 시리즈의 내용을 봐도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국정화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공보위의 판단이다.

④한국사 교과서에 비친 이승만·김일성, ⑤교사용 지도서·참고서 편향 논란, ⑥현장에서 빛어지는 편향 교육, ⑧집필자 자격기준 없다시피 한 역사교과서 등의 기사는 국정화 찬성 쪽의 시각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고, 반대쪽의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정도에 그쳤다.

작성 단계에 포함됐던 국정화 반대 목소리는 데스크 과정에서 일부 삭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급기

야 한 교수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취지로 기사에 실렸다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측은 지난 9일 편집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획을 논의하면서) 현재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 목소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만에 철회된 ‘국정’ 대신 ‘단일’ 표기 지침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 예고하고 사흘이 지난 10월15일.

편집국장 직무대행의 지시사항이라며 일선 기자들에게 당혹스런 방침이 하달됐다.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국정 역사교과서’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표현 대신 가치중립적 표현을 쓴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단일 역사교과서’라는 용어를 쓰라는 지시였다.

국정은 검정, 인정 등과 같이 객관적인 법적 용어로 지극히 가치중립적이

다. 그럼에도 마치 ‘국정’보다 ‘단일’이 중립적인 표현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시사항은 충실히 이행됐다. 방침 하달 이틀 전인 10월13일에 ‘단일 교과서’나 ‘교과서 단일화’라는 표현을 쓴 기사는 전무했지만 15일에는 30여건에 달했다.

방침이 제대로 하달되기 전인 15일 오전 일찍 작성된 기사들은 ‘국정화’라는 표현이 ‘단일화’라고 수정돼 출고됐고, ‘국정화’라는 표현은 인용부호 안

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 교과서’라는 표현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생한 용어가 ‘올바른 역사교과서’였다.

공보위는 15일 저녁 사측에 해당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사측은 16일 새 방침을 하달했다. ‘단일교과서를 활용하라는 것은 국정

교과서란 용어를 대체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국정화라는 단일 어휘만 반복하지 말고 문맥에 맞게 다양한 표현을 쓰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9일 편집위원회에서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만에 철회했다”면서 “(최초 지시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쓸쓸한 뒷맛을 남겼다.

국정 교과서는 ‘명품’ …현행 교과서는 ‘좌편향’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사 곳곳에서는 오해를 살만한 용어들이 선택된 경우가 눈에 띄었다.

10월28일 송고된 <‘명품 교과서’ 공은 교육부로… 차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주력> 기사에서는 제목에서 국정 교과서를 ‘명품 교과서’로 명명했다.

기사 본문에서 ‘명품 교과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 등장한다. “박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은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편향되지 않은 명품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는 대목에서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직접 인용 부호도 아닌 작은 따옴표와 함께 제목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 현행 교과서는 ‘좌편향’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다.

<바른 역사교육> 기획기사의 10번째 쪽지 <⑩검정

교과서 ‘검정’에 손놓은 교육부>의 3번째 문장은 「이 때문에 ‘좌편향’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보급한 책임에서 교육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돼 있다. 작성단계에선 ‘국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 삭제된 채 송고됐다.

사측은 지난 9일 편집위원회에서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는 박스에 청와대의 주장을 제목으로 붙이다보니 싱글쿼트(작은 따옴표)로 붙인 것”이라며 “(한쪽의 주장을 담은 표현을 넣을 때) 기사 기법상 흔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 역사교육> 시리즈의 <④한국사 교과서에 비친 이승만·김일성> 기사에서도 ‘친일청산 실패·독재’라고 작은 따옴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는 ‘명품 교과서’나 ‘좌편향’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일부 교과서가 ‘친일청산 실패 및 독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어서, 일방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팩트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측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 많은 기사를 처리했다고 했지만 이 같은 사례를 발견하기는 힘들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적절하게 처리된 기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작은 따옴표 용례는 3가지다. ▲따옴표 말 가운데 다시 따옴표가 들어 있을 때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